“법인 · 직원 화합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기획] 표류하는 나눔의집
상 본질 벗어난 감정대립
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눔의집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불교계 안팎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부제보 직원들과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 · 운영진 간의 갈등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운영상 미흡이 확인된 가운데 내부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의 개선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적인 여론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사건건 의혹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청이 특별지도점검에 이어 추가적으로 민간과 합동조사에 착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태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따른 부담감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록 내부제보 직원들의 도 넘은 의혹 제기나 월권행위 등이 지나친 측면이 있더라도, 시시비비를 따지고 대립하기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 불교계 복지법인 관계자는 “이미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 사태수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제보 직원들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에서 논란이 재생산돼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능에 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와 이미지가 가장 큰 기반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안팎의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핵심은 법인과 시설 각각의 운영시스템에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운영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부제보 직원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객관적 지위의 인사를 운영에 직접 참여시켜 상호 견제를 통한 운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 재확산돼자 경기도 이례적 추가 조사
불교계 안팎 전문가들 “내부갈등 해소부터”
외부인 이사 영입… ‘후원금운영위’도 대안

우선 법인 이사회의 경우 공익이사 및 외부이사 추천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른 식견과 역사의식, 객관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법인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눔의집의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필요할 시 내부제보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영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시설의 경우 ‘후원금 운영위원회’ 등 미비하다고 지적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별도의 운영조직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나눔의집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의혹을 가진 직원이 직접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은 물론 이를 통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등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변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부 직원들의 사회복지 전문성 수준을 감안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불교계 복지법인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전 관계자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후원금이나 보조금 사용, 시설 운영 전반사항은 관련 법과 규정, 지침에 의거해 대단히 세밀한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다”며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것보다 아예 권한과 책임을 주고 운영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 사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입장문이나 비판성명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실제 감사결과 횡령 등 문제가 없었고 사회복지 규정은 계속 강화돼 왔기에 운영 미숙으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부제보 직원들이 사회복지 현실을 얼마나 아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후원금 부적정 사용,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부적정 사용, 후원금 전용계과 관리 부적정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등 12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광주시청 감사결과와 동일하게 횡령 문제는 없었다.

나눔의집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운영위원회 재구성 등 시설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비구니 수행 · 포교 이끌어 주십시오”

전국비구니회, 7월 9일
원로 추대법회 봉행해

적조 · 명우 스님 등 7명 추대
명사추대품계위 회의도 열려
“비구니 전통 따라 명사 추대”



전국비구니회는 7월 9일 법륭사서 제2차 원로추대식을 열고 적조 · 명우 · 도문 · 육문 · 성일 · 영운 · 묘순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한국 비구니 전통과 위상을 대표하는 비구니 원로 스님 7명이 비구니회 원로회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9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웅전에서 제2차 원로추대식을 열고 적조(금륜사), 명우(성심사), 도문(석남사), 육문(법주사), 성일(신흥사), 영운(백흥암), 묘순(삼선포교원)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비구니회 원로회는 경순, 법운, 경희, 정륜, 경심, 성타 스님 등 명예원로의원 6명 스님과 1 · 2차 추대 원로의원 25명 스님을 원로회에 모시게 됐다.

원로회 의장 명성 스님은 수석부회장 수현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비구니회를 이끄는 스승의 자리에서 비구니들이 청정 수행을 이어가고 홍법포교에 전념하도록 경책하고 길을 제시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향기로운 가르침을 펼쳐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모시는 말씀에서 “전국에는 원로의원 자리에 오르실 많은 비구니 어른 스님들이 계시지만 회칙에 따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구니회는 모든 원로 스님들이 앞으로 본사와 종단을 통해 명사의 법계에 오르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12월 명사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추천과 관련 비구니 전통에 따라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원로회 의원 모두가 자격을 지닌다.

전국비구니회 명사품계위원회는 이날 원로추대식에 이어 회의를 열고 명사 추대 지원자 스님들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명사 추천절차의 의미에 대해 “명사품계위원회는 원로회 의장 명성 스님께서 종단 법계절차를 준수하되 비구니의 전통에 따라 명사가 추대돼야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신 데 따라 구성됐다”며 “원로의원으로 모신 것은 곧 명사로까지 모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자격 및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공정한 추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명사추대 지원자 심사표’에 따라 품수자격과 가람수호 · 대중외호, 수행, 교육, 포교 · 사회복지 · 행정, 전국비구니회 회장직 등 6개 항목의 객관적인 평가수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서는 제정을”

원행 스님, 국가인권위원장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월 9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그동안 불교계가 주장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하겠는가”를 물은 원행 스님은 “부처님은 계급을 타파하는 등 교리적으로 평등을 중요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종교의 우려가 있지만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문제는 차별금지 논란의 본류가 아니므로 차별금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인권위원회 차원의 법안 발표와 더불어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이 이어졌다.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89%의 국민이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면서 “국회에 수시로 방문해 대정당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과 불교,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4대 종교계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의지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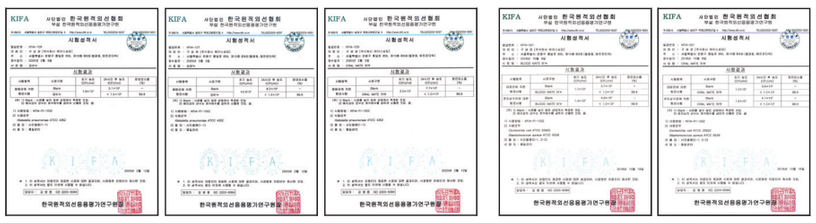
정의당(대표 심상정)은 7월 8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종교계 간담회를 열고 각 종교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정의적 합의”라며 “조계종을 비롯해 불교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차별금지법’을 입법발의한 상황이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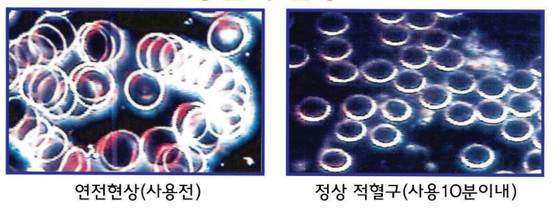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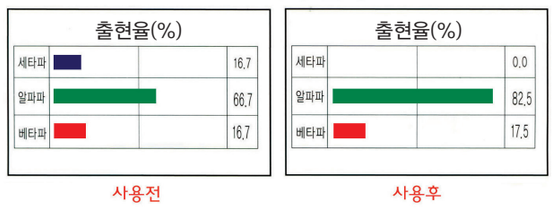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뇌파 측정촬영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통증이 그냥 사라지며
▶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의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 저녁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 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아침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하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치약만 사용했을 뿐인데 비누는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 정상화에 의한 건강이 유지되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일 것입니다.